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 검토

이현진 연구위원(국민경제연구센터/경제학 박사)

<요약>

- ◎ 취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장년 및 고령층 근로자의 취업 증가 때문으로 보임
- ◎ 임금피크제는 도입되더라도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워 보임
- ◎ 청년층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들로 인해 청년층의 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금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업친화적 정책,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정책으로 부처별로 대동소이한 정책이 중복되고 대부분 한시적 단기 지원책에 한하고 있어 장기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들에 대해 안전 관련, 삶의 질 관련,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직접 채용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청년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1. 정부,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 및 예산안 발표

□ 「2016년도 일자리 예산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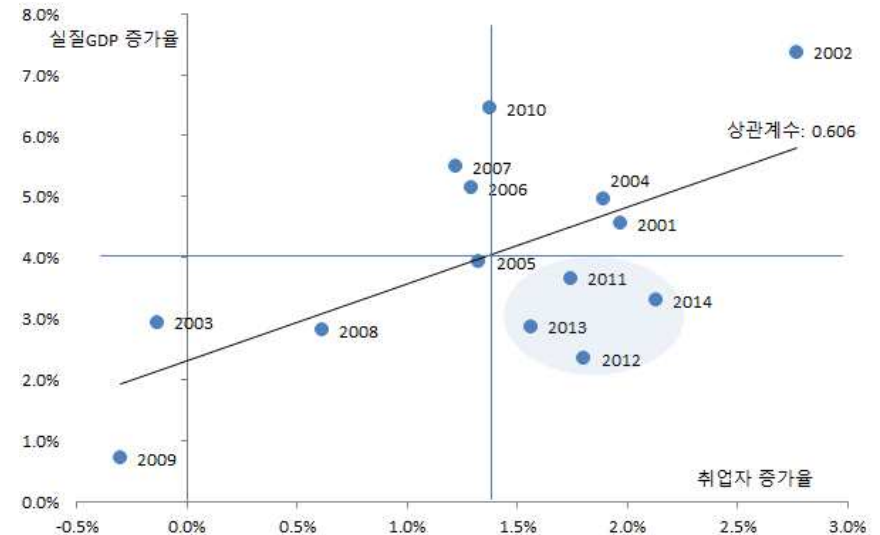
- 정부는 9월 9일, 2016년도 일자리 예산안 15조7,685억원으로 발표함
 -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9,748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1조7,937억원이 증가한 15조7,685억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안은 2조1,213억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원이 증가(20.6%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 청년 일자리 예산안은 지난 7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시각과 대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청년 고용 부진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타당성

□ 경제적 요인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며 신규인력 수요 저하’되었다고 진단함
 -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의 관계를 보면 2011년 이후 급격히 관계가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제 및 산업구조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했다는 해석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그림 1]
 - 오히려 취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 즉, 저임금 부문의 취업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이는 정부의 고용을 제고 정책의 결과로서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장년 및 고령층 근로자의 취업 증가로 보임(이에 대해서는 [그림 4], [그림 4-1], [그림 4-2] 참조)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취업증가율 간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참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0.885임

- 한편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 근거로 1) 취업유발계수¹⁾(명/10억원)가 2000년 25.5에서 2012년 13.2로 감소한 점과 2)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연에 따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 정체를 들고 있음
- 2013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보면, 농작물(43.7), 사회복지서비스(42.7), 회계나 청소 등 사업지원서비스(31.2), 임산물(30.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26.6) 등은 높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4.7), 전자표시장치(2.5), 반도체(3.2), 항공운송서비스(2.5), 석탄 및 석유제품(1.8)

1) 생산이 10억원 증가할 때 취업자가 몇 명 증가했는지는 나타내는 것으로, 자본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함. 따라서 취업유발계수는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노동집약적일 수록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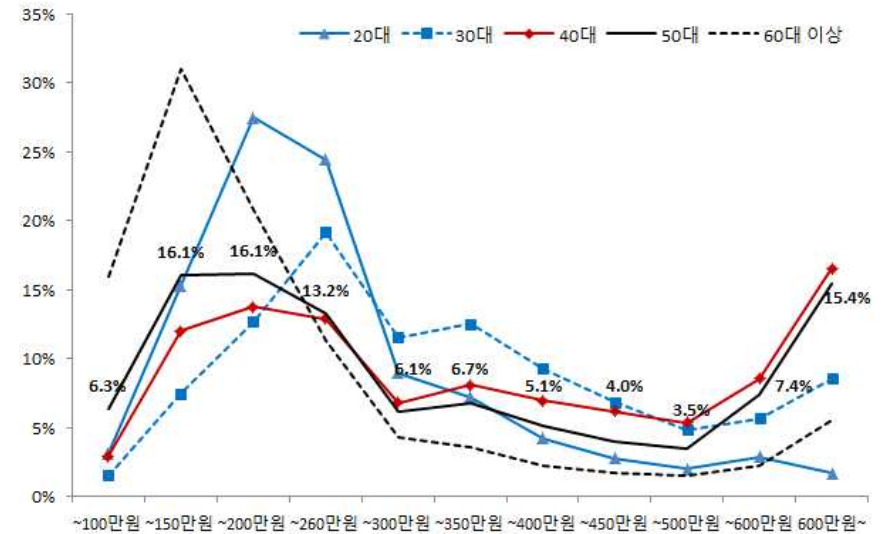
등은 낮음. 통상적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도 낮음. 2014년도 전산업 평균 월급여액은 3,189,995원인데 반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은 1,772,354원,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882,729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61,753으로 모두 평균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음

- 이상으로 볼 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유발계수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저임금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일자리 안정과 저임금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이와 연장선상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또한 반드시 저임금을 정상화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 구조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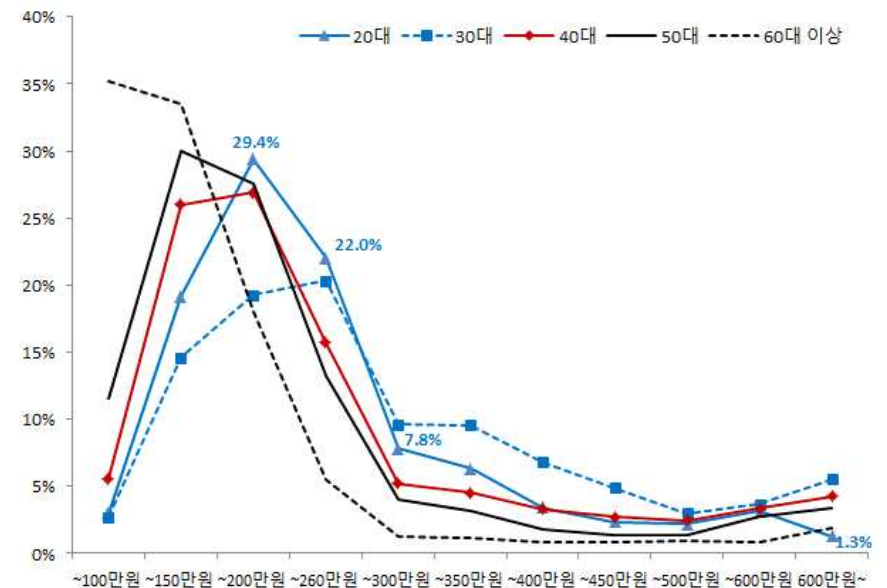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된다고 함
 - [원인: i)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임금피크제 미도입), ii)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 [결과: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
 - 이는 1)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대기업 정규직)가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2) 대기업 정규직을 대폭 늘리거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거나 3)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을 대기업 정규직 수준으로 높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무엇이든 모든 책임과 원인을 노동계와 기업들에게 떠미는 것으로서 정부로서 책임 있는 모습도 아니며 이러한 진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근거가 될 수도 없음
 - 임금피크제는 도입되더라도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워 보임. [그림 2]를 보면, 50대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를 연장하고 임금을 최고점 이후부터 낮춘다 하더라도 월 임금 500만원 이상 50대 근로자의 비중은 22.9%로 임금의 대폭적인 절감은 어려워 보임
 - 오히려 50대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기까지 함.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20대 여성 근로자는 200만원 미만으로 정점으로 300만원 미만으로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저임금 근로자 고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그림 2-1]
 - 한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간 20대 청년층 근로자의 월 임금분포 변화를 살펴본 것이 [그림 3]임. 그림을 통해 보면, 2009년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7.9%에서 2014년에는 15.3%로 감소하고 260만원 미만 근로자는 19.5%로 증가함. 또한 26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 역시 2009년도 이후 미미하나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20대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 조건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즉,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일자리의 공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그림 2] 연령대별 근로자 월 임금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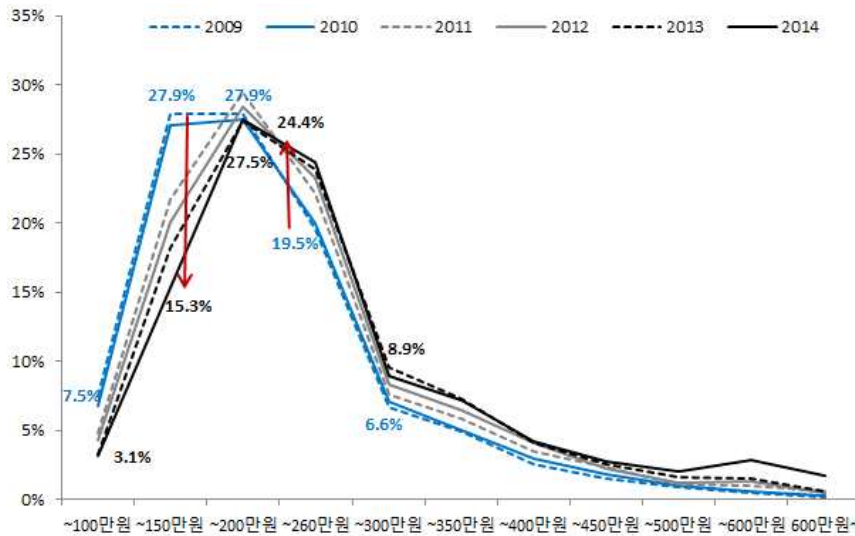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각 연령대별로 임금이 1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에 속하는 비중들을 모두 합하면 100%임

[그림 2-1]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임금분포(2014년)



- 그러나 20대 청년 실업률이 2009년 7.88%에서 2014년에는 9.03%로 1.16%p 증가한 것을 볼 때, 실상은 청년층 근로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여 저임금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양상임. 청년층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²⁾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들로 인해 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어떠한 정책을 쓰든지 간에 청년층에게 저임금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무용지물임. 최소한 현재는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생애주기 현재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최우선 정책일 것임

[그림 3] 20대 청년층 근로자의 월 임금분포(2009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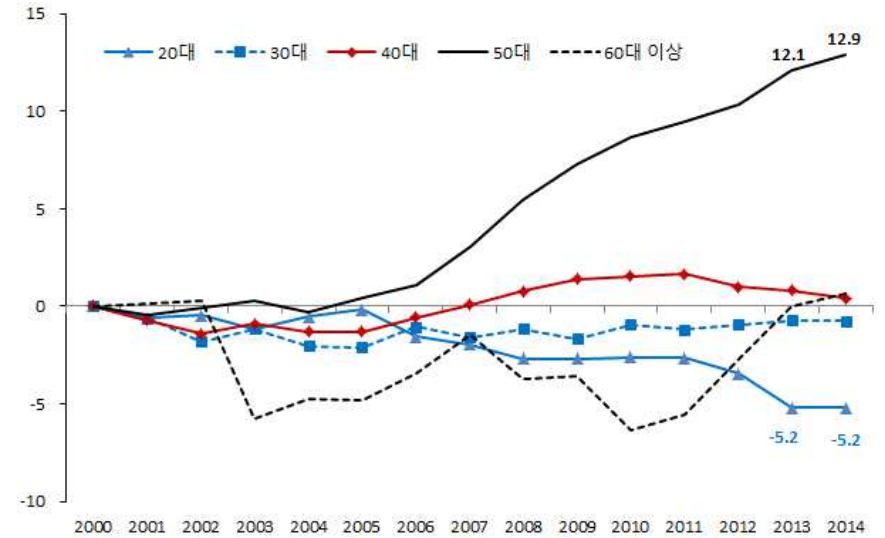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 '기업은 신규채용시 신입직원에게 비해 훈련비용 및 시간이 적게 드는 경력직을 선호'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 이는 당연한 해석처럼 보일 수도 있음. 그러나 [그림 4]를 통해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20대와 30대 간에 신입, 경력직 간의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30대와 40대 간의 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대 청년층은 이미 30대와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거나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기조로 인한 자발적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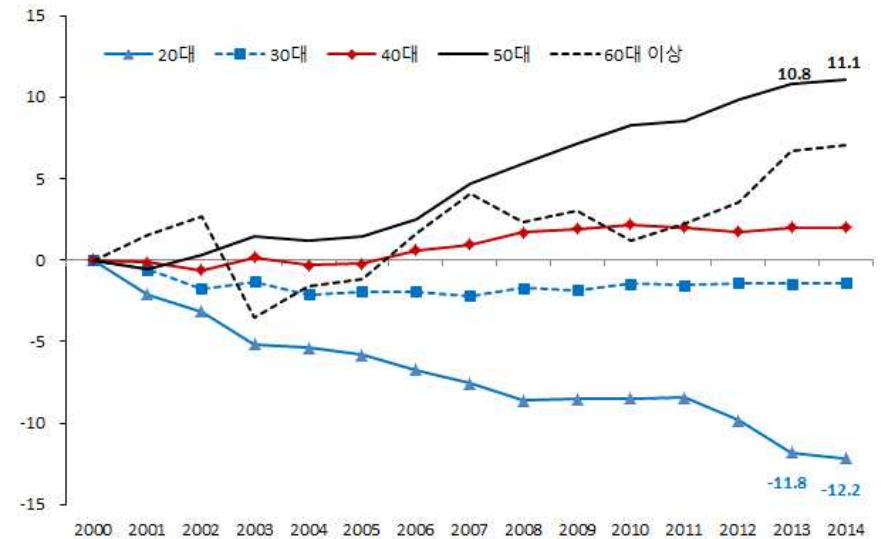
2) 근로자가 고용되면 최소한 받았으면 하고 원하는 임금으로 실업과 취업 결정의 경계가 되는 임금수준을 의미함

[그림 4]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인구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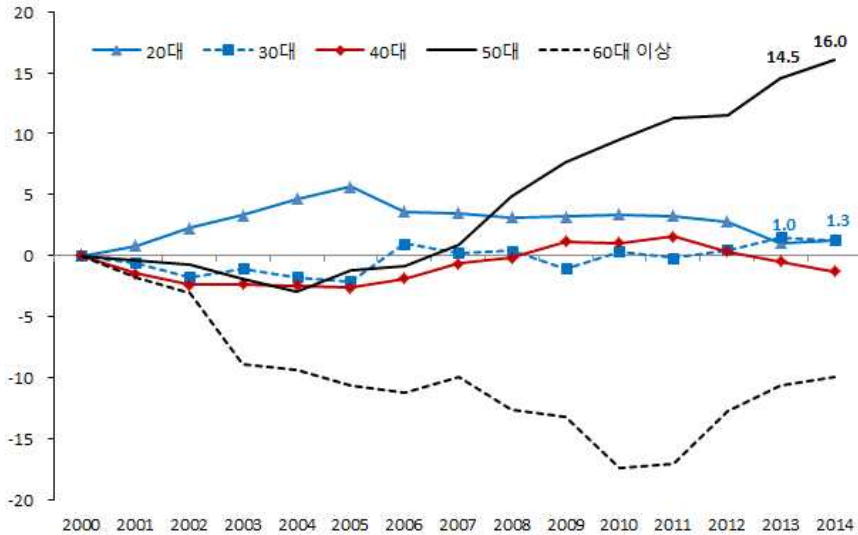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취업자 비중 및 인구 비중은 2000년도를 100으로 표준화, [그림 4-1, 4-2] 동일

[그림 4-1] 연령대별 남성 '취업자 비중-인구 비중' 변화 추이



[그림 4-2]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비중-인구 비중' 변화 추이



○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일자리 정보 관련 미스매치도 상존'한다는 것임

- 정부는 대학의 인력 양성과 산업계의 필요 인력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금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3,45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그 방안은 대학의 학사과정 개편, 단과대학 신설(비학위, 비학점 가능)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채택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학과 개편 등을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할 사안임과 동시에 과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산업계 요구 인력과 대학교육에 대한 재고(再考)

정부는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의 예로서 고용정보원이 작성한 전공별 인력초과수요(천명, 2013년~2023년간) 자료를 제시하는데, 인문사회: △61, 예체능: △97, 사범: △26, 자연: △134, 공학: 277, 의학: 37임.

(대학)교육에 대해 참고할 예로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후 수학과로 전과(중퇴), 스티브 잡스는 리드칼리지(Reed College)에 의학과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중퇴),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대학교에 컴퓨터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으로 입학(중퇴), 엘론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로 편입해 물리학과 경제학 학사학위를 취득함 이들의 공통점은 1) 대학을 중퇴한 경영자들이 많다는 것과 함께 2) 이·공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 3) 위 경영자들 모두 어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독학 등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이에 대해 교수들과 활발히 교류

했다는 것임. 한편, 중국의 책 마윈은 항저우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교사로 근무한 바 있음

3. 정부 발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내용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함([참고 1]의 정리표 참조). 이의 추진을 위해 9월 9일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을 발표함([참고 2]의 주요사업 설명 참조). 이하에서는 일자리 예산 중 청년 일자리 예산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 부실한 발표 내용

- 예산안 관련 자료임에도 사업 내용뿐 아니라 금액에 대한 설명 대부분 누락
 - 청년 일자리 재정지원 예산은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하여, 1) 직접일자리 창출에 3,837억원(7만4천개 일자리), 2) 직업훈련에 9,427억원, 3) 고용서비스 지원에 2,126억원, 4) 고용장려금 지원에 2,560억원, 5) 창업 지원에 3,263억원으로 총 2조1,213억원의 예산을 2016년에 편성할 것으로 발표함
 - 그러나 별첨자료를 포함하여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을 통해 정부가 제시 및 설명한 사업들의 예산 합계는 1조7,376억원으로 2조1,213억원 중 3,837억원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음. 이는 청년 일자리 예산의 18%에 달하는 금액으로 금년 대비 증액된다는 3,629억원 보다 많은 액수임
 - 정부 보도자료가 국회에 제출한 정식 예산안이 아니지만,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중요 정책이라고 서둘러 발표·홍보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내용 설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임에도 사업내용과 예산 간의 연결이 어려움
 - 아래의 [표 1]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금액은 [참고 2]의 정리를 통해 제시하였음. 다만 표의 붉은색 글씨는 설명이 누락된 사업들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직접일자리 창출부문 중 외교부의 '해외봉사단(ODA)' 사업 1,195억원,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979억원,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83억원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여부에 대한 설명은 물론 고용부문, 고용대상, 고용목적, 고용인원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하는 수준임
 -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정부의 사업설명에 따르면,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급여의 일정액을 기업에 지원해 줄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에도 급여 일부분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임. 직접일자리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마치 청년에게는 참고 버티고, 기업에게는 청년을 일꾼으로 부탁하고 실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이 서투르니 잘 봐달라고, 또 당분간 데리고 있어달라고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것과 같음. 이를 위해 2,37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함
 - '창업인턴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이 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지원금 등을 주는 것으로 이 또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벤처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임

- 직업능력개발 부문은 직업훈련 학생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기업, 대학 등)에는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이 부문 또한 다수의 사업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명과 예산액만 제시되어 있음

[표 1] 정부 발표 주요 청년 일자리 예산 (9.9. 발표)

억원					
구분	부처	사 업 명	설명*	15 년 (본예산)	16 년 (예산안)
직접일자리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2(분할)	168	435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누락	101	83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누락	1,051	1,19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누락	848	979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21	50	100
① 직접일자리 예산 계				2,218	2,792
직업능력개발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7	301	359
	고용부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 훈련	6	1,857	3,741
	고용부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	9	812	1,089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4	2,296	2,733
	고용부	기술·기능인력 양성	누락	715	728
	고용부	직업훈련 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누락	155	195
	고용부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누락	22	29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누락	229	206
② 직업능력개발 예산 계				6,387	9,080
고용서비스	고용부	청년 취업진로 지원	13	58	165
	고용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15(일부)	940	1,474
	고용부	해외취업 지원	16	356	421
	고용부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	35	-
	고용부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	25	-
③ 고용서비스 예산 계				1,414	2,060
고용장려금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2(분할)	1,662	1,941
	고용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	-	619
	고용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	15	-
④ 고용장려금 예산 계				1,677	2,560
창업지원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	18(누락)	946	1,133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20	652	753
	중기청	창업인프라 지원	22	307	375
	중기청	창업저변 확대	누락	338	364
	중기청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	1,600	-
⑤ 창업지원 예산 계				3,843	2,625
⑥ 청년 일자리 전체 예산 계 (①+②+③+④+⑤)				13,321	16,325
⑦ 정부 보도자료 발표 청년 일자리 전체 예산				17,584	21,213
미분류 정부 발표 예산 (⑦-⑥)				4,263	4,888***
설명 누락 및 미분류 정부 발표 예산**					9,277***

* 본 보고서 '참고'의 「2016년 일자리 예산 주요 사업 설명 정리」 상의 사업명 번호임
 ** 표의 설명 항목에서 '누락'으로 표기된 사업이 설명 누락 예산임. 창업사업화지원은 1,474억원 중 610억원에 대한 설명이 누락됨
 *** 4,888억원과 9,277억원은 정부 발표 청년 일자리 전체예산 중 각각 23.0%, 43.7%에 해당함

- 고용서비스 부문은 기업 탐방·연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주거나 참여 청년에게 훈련비를 지원함. '해외취업지원'은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연 1,500만원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임. 취업에 성공했다고 정부가 축하금 내지는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됨
- 고용장려금 부문 중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 연 1,080만원을 기업에게 주는 정책임. 2018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임
- 창업지원 부문 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1,133억원의 예산이 배정하였으나 [참고 2]의 18번에서 보듯이 523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설명됨.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인턴제' 등 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스러움. 또한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해 어떤 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쓰일 것인지 알기 어려움

※ 참고

정부 정책이라고 내놓는 대국민용 보도자료 속의 공식 행정용어들이 순화되지 않은 채 난무하는 외국어로 뒤덮여 있음. '~아카데미', '~센터', '~존', '인프라', '매니저', '멘토링',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이고, '패키지', '미스매치', '코칭' 등은 큰 고민 없이 쓰는 것으로 보이며, 'K-Move 스쿨',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같은 작명은 우리 사회의 외국인들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젊은 해외동포들과 타문화지역 출신 국민들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작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함. 관료들이 불필요한 외국어를 남용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에게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일부 국민에게만 전달하고 자신들이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과 별 연관 없는 대책들

- 정부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보다는 정확한 판단과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정부는 청년 고용의 부진 원인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 미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기업의 경력직 선호, 산업계의 수요와 대학의 교육 연계 미흡 등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음. 단지 기업체에 인턴으로 청년을 고용하거나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 기관 및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정책임. 기업이나 대학이 본연의 기업 업무나 대학이 전공 교육보다는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진 맞춤형 인재가 되어 취업이 될 수 있을지 효과가 의문시됨
 - 충분히 예측가능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미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은 반성하지 않고 경제 환경이나 노동계·기업·대학 등 외부와 국민만 탓하며 원인 규명 따로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내놓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 대응에 실망함

4. 결론

□ 여전한 전시행정

-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 단체,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 정부는 기업체 및 대학 등에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각 기관에 생색을 내고 각 기관은 인턴, 교육생 등에게 정부의 자금으로 생색을 내는 정책들이 대부분임. 또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정책들임
- 행정편의주의 정책으로 거의 금전적 지원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임
 - 실제로 관료들이 직접 청년들의 고용이나 훈련, 취업 관리 등에 관여하여 직접 챙기는 정책이 아닌 대부분 기업체, 대학 등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쉽게 관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 대부분임
- 부처별로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중복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인턴제, 청년 교육 사업 등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 관리·운영하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정책들이 포함됨
 - 특히 교육부의 정책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예산 늘리기 정책인지 과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을 품게 됨
- 대부분 한시적 단기 지원책에 한하고 있어 장기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산업연수 등에 대해 기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보조금 지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인지, 과연 청년 고용 증가 및 고용 유지라는 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스러움

5. 정책 제언

□ 정부와 공공기관의 과감한 직접 채용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기업체 및 기관 지원을 위해 편성한 15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안을 직접적인 고용 창출에 투입

- 안전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경찰, 소방 등 안전관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적절한 수준의 인원 보강
- 삶의 질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 지원 공무원 인원 보강

○ 교육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특수 교육, 학교행정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인원 보강

→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

→ 또한, 향후 공직 경험 축적이 경력 사다리가 되어 청년층, 중년층의 이직 및 전직을 용이하게 하고 숙련된 직무 관련 생산성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함

□ 청년 창업의 실질적 활성화

○ 특허 기술의 활용과 제품화 구현

- 청년 창업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개발 및 시장성이 있는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관리의 특허 풀(pool)을 확대·조정하고 시제품 제작과 개선을 위한 한국형 창업제작소(Fab-Lab)의 확산

※ 참고 1: 정부 발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일자리 창출방안 (7.27. 발표 정리)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1. 공공부문 청년고용				
1-1-1	교원 명예퇴직 수용 확대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 월
1-1-2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교육부	제도 개선	'15.9 월
1-1-3	특수교사 확충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 월
1-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확대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 월
1-1-5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복지부	사업지침 개정	'15.9 월
1-1-6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복지부	예산안 반영	'15.9 월
1-1-7	간호인력 DB 구축	복지부	DB 구축	'15.12 월
1-1-8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	복지부	계획 마련	'16 년
1-1-9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복지부	예산안 반영	'15.9 월
1-1-10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 월
1-1-11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기재부	계획 마련	'15.12 월
1-1-12	공공기관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고용부	법 개정	'15.12 월
1-1-13	인문제 연구기관 시간선택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지침 마련	'15.11 월
1-1-14	공무원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확대, 전환제도 개선 등	인사처	개선방안 마련	'15.12 월
1-2.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2-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재부	법 개정	'15.12 월
1-2-2	기존 지원제도 일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검토	기재부	법 개정	'15.12 월
1-2-3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신설	고용부	시행령 개정 예산안 반영	'15.8 월 '15.9 월
1-2-4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고용부	예산안 반영 시행령 개정	'15.9 월 '15.12 월
1-2-5	청년인턴제 우량기업 인증제도 도입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15.9 월
1-2-6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 월
1-2-7	대기업 직업훈련 신설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5.9 월
1-2-8	대학 재학생 훈련 확대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5.9 월
1-3.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1-3-1	취업규칙 변경절차·기준 명확화	고용부	지침 개정	'15 년
1-3-2	근로계약 기준·절차 명확화	고용부	지침 개정	'15 년
1-3-3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고용부	법 개정	'15 년
1-3-4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부	법 개정	'15 년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2-1.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				
2-1-1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활성화	교육부	개선방안 마련	'15.9 월
2-1-2	LINC 사업 평가시 취업성과 반영 확대	교육부	계획 수립	'16.3 월
2-1-3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	교육부	시범대학 선정	'15.8 월
2-1-4	계약학과 설치요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	교육부	운영요령 개정	'15.8 월
2-1-5	중소기업 채용조건형·재교육형 계약학과 확대	중기청	예산안 반영	'15.9 월
2-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교육부 고용부	예산안 반영 추가 지정	'15.9 월 '15.10 월
2-1-7	Uni-Tech 육성사업 본격 운영	교육부 고용부	시범사업 실시	'15.9 월

2-1-8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지원 강화	고용부	예산안 반영 지원계획 마련	'15.9 월
2-2.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체질 개선				
2-2-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고용부 교육부	전망 실시	'15.10 월
2-2-3	PRIME 사업 세부내용 확정	교육부	계획 마련	'15.12 월
2-3. 중소기업 취업 촉진				
2-3-1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중기청	법 개정	'15.12 월
2-3-2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관련 분기별 고시 시행	국토부	고시 시행	'15.9 월
2-3-3	중기 밀집지역 공동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강화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 월
2-3-4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개편안 마련	병무청	관리규정 개정 고시 반영	'15.9 월 '16.5 월
2-3-5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확대	교육부	예산안 반영	'15.9 월
2-3-6	성과보상기금 수령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재부	법 개정	'15.12 월
2-3-7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 확대	중기청	법 개정	'15.12 월
2-3-8	성과보상기금 참여 중견기업 기여금 손금상입 허용	기재부	시행령 개정	'16 년초
2-3-9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유도 등	중기청	예산안 반영	'15.9 월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3-1. 청년 일자리 사업 재편				
3-1-1	청년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 월
3-1-2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기준 확대	고용부	시행령 개정	'15.9 월
3-1-3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신설	고용부	법 개정	'15.12 월
3-2.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2-1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 월
3-2-2	청년고용+센터 확대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 월
3-2-3	통합전산망 구축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 월
3-3. 청년 해외취업 촉진				
3-3-1	해외취업 지원시스템 개선	고용부	협의체 운영 등	'15.8 월
3-3-2	전문인력 진출 확대	고용부	전략 수립 등	'15.9 월
3-3-3	K-Move 사업 재정비	고용부	예산안 반영 등	'15.9 월

※ 푸른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금번 「2016 년 일자리 예산안 발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

※ 참고 2: 2016 년 일자리 예산 주요 사업 설명 (9.9. 발표 정리)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15년 (억 원)	16년 (억 원)	총액 (억 원)
1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① 세대간 상생 노력(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② 청년(15~34세) 정규직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15.하반기~18년 한시운영)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 (공공기관 포함)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 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 만원)	123	619	496
2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중소기업 2만명, 중견기업 3만명)	1. 인턴: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 34세 미만 대상,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2. 실시기업: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피보험고용자수 5인 이상 사업장(벤처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허용)	1. 인턴: 제조 생산직(그 외 직종) 인턴수료하고 정규직전환 6개월 후 최대 300(18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각 지급) 2. 실시기업: - 인턴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 (*인턴채용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 이내, 강소·중견기업 30% 이내) -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시 월 65만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총 390만원)	1,830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168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1,662	2,376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435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1,941	546
3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대기업(공공기관)·혁신센터의 주도하에 대기업의 우수한 자체 훈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졸자의 직업훈련 실시한 후, 수료생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창업도 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기업·공공기관, 청년 구직자(고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및 채용예정자 (1만명)	1.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2. 프로그램 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등 (연간 1억원) 3.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협약기업 관리지원 인력 인건비,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연간 4억원) 4. 훈련비: 강사료·교재비·재료비 (실비) 5. 훈련수당: 훈련생에게 월 20만원	0	418	418
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보유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교육 훈련 제공 2.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수요에 기반한 공동훈련을 위한 효율적 체계 구축 지원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공공기관	1. 공동훈련센터(훈련제공 기관): 훈련시설·장비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훈련인프라 비용(20억 한도) 및 훈련비 지원 2. 참여 중소기업: 양질의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및 우수 인력 확보 지원	2,296	2,733	437

- 15 -

5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 지원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1. 지원요건: 1. 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훈련 실시 2. 지원수준: 사업주 자체훈련단가의 120%(대기업 80%, 1,000인 이상 기업 50%) 지원 3.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 지원	4,628	5,263	635
6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기간·전략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및 수요증가 직종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인력난과 실업문제를 해소 (*고용노동부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되, 훈련실시만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위탁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선정))	1. 15세 이상 실업자 2. 비전학 고 3 재학생 3.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중 졸업예정자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5. 초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1. 훈련비: 전액지원(한도 없음) 2. 훈련장려금: 대상자 특성에 따라 훈련장려금 차등 지원 출석일수(월 단위로 80% 이상 출석 시) 및 대상자에 따라 월 최대 416천원 지원 (*고 3: 216천원, 대졸예정자: 236천원, 일반실업자: 316천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416천원)	1,857	3,741	1884
7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도모 (*운영기관: 기업·사업주단체, 대학·민간 우수훈련기관('15.7월부터 허용))	1. 연수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 (*대학(전문대 포함)의 경우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일반고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가능(졸업자 제외)) 2. 장학과정: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50%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교육비 전액지원 (운영기관 20% + 정부지원 80%) 1. 일반과정: 1인당 347만원 2. 인문계 특화과정: 1인당 530만원 (2천명)	301	359	58
8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훈련기관평가 및 인증제, 훈련과정심사, 훈련과정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훈련과정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130	164	34
예산 계 (억 원)					11,165	15,673	4,508

- 16 -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15년 (억 원)	16년 (억 원)	증액 (억 원)
9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주로 기업현장에서 현장 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1. 참여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대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전담인력 양성,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지원 등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2. 학습근로자: 취업 및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자격 또는 학위연계 가능)	812	1,089	277
10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PRIME) (교육부)	인력 불균형이 심한 분야의 학등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대학 미스매치의 양적 조정과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지원 1. 양적 조정: 학생 진로가 불투명하고 취업 진로이 구조적으로 힘든 분야를 이동 취업 중심학과로 정원 이동 2. 질적 개선: 장기적인 인력공급 유연화를 위해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지식 창출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개선 3. 지역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액을 배분하는 방안 마련으로 대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 유도	0	2,062	2,062
11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 지원 (교육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시스템과 별도로 성인만을 위한 단과대학 신설 학점과정 및 다양한 비학위·비학점 과정 운영	대학	0	300	300
예산 계 (억 원)				812	3,451	2,639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15년 (억 원)	16년 (억 원)	증액 (억 원)
12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미래부)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고용디딤돌 등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기업·산업계인력 수요조사 지원, 방문·상담·훈련·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17개 40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13	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	청년에게 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중소기업 사례 탐구 및 취업 연수 등을 통한 청년·중소기업 간 정보·미스매치 완화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기여	1.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만 18세 ~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3.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대학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1. 취업지원관: 7천만원 한도 2. 대학청년고용센터: 55백만원 수준 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간 총사업비 5억원 4.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1인당 10만원 운영비 지급 5.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인당 60만원 운영비 지급	58	165	107
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자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제언하면 공모를 통해 지원	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자금 부담 10%~40% - 지자체가 일자리창출 관련 인력 양성, 고용 서비스 지원 등 실시 2.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의 지원방식 정비 (민간경상보조→자차단체경상보조)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별 사업수행비용 및 운영비 지원 (지역일자리창출 발굴사업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패키지로 구성)	900	999	99
1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진단·경로설정(1단계)→직업능력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1. 취업성공패키지 I: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기타 특정계층(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노숙인) 2.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이하 중장년(35~64세)	1. 1단계(진단·경로설정): (패키지 I) 최대 25만원 수당, (패키지 II) 최대 20만원 수당 2. 2단계(직업능력증진): 훈련비 200~300만원 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월 40만원 지급(6개월간), 청년인턴, 장년인턴 등 참여 3. 3단계(직중 취업알선): 패키지 I 유형에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근속 기간과 연계)	2,746	3,136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1,474	390
16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해외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만 해당)	1. K-Move 스킴: 우리청년이 강점을 지니고 있거나, 신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 및 해외취업과 연계 (*장기(6~12개월) 교육과정 최대 800만원 지원) 2. 해외취업성공장려금: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 지원	356	421	65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취업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지원. 단, 단순노무직, 연봉 1,500만원 이하,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제외) 3. 해외진출 통합 정보 제공: 국가별·지역별 해외 일자리 정보, 해외 취업·인턴·봉사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K-Move 멘토링, K-Move 스쿨, 해외취업 성공사례 등 해외진출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Hub 구축)			
17	교원 해외진출 사업 (교육부)	1. 기존에 소수 ODA 대상국에만 교원을 파견하던 사업을, 非 ODA 국가까지 포괄하고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파견 하는 사업으로 확대·개편 2. 파견 대상자도 단계별로 다양화하여 상대국가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발, 교육하여 파견	예비·현직 교원 등을 2016년부터 매년 장기(1~3년) 140명 및 단기 160명 파견 예정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원을 반영			
18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청)	창업지원 전문가를 통해 유망한 (예비)창업기업 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전문가 참여, 선진 사업모델 개발기법을 활용하여 사업화 과정 지원으로 도약과 생존을 제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 (창업 3년 미만)	1. 창업맞춤형사업화: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보강, 시장진입 등 사업화 지원 2.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1) 해외 창업지원: 해외 연수·보육 프로그램 참여비용 지원 2) 외국인 창업지원: 창업비자 발급상담, 창업아이템 구체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3.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공간 제공, 전담코칭, 실무교육,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지원 등 창업 전 과정 지원 4. 창업인턴제: 창업·벤처기업 현장근무 지원 및 사업화 지원 5.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 인프라비(창업준비공간, 집기 및 비용), 정보활동비(기술경영자문 등),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6. 민간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창업기획사가 직접 유망한 창업팀을 선별하여 자본투자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전담코치 및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423	523	100

- 19 -

1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청)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과정을 일괄 지원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3년 이하인 자	1. 창업공간, 창업교육 및 코칭(1:1 전담 코칭) 등 제공 2.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지적재산권 취득비 등으로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260	260	0
20	창업선도대학 (중기청)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 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 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을 권역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34개)	1. 사업화: 제조·지식서비스분야(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2.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753÷34=22	652	753	101
21	창업인턴제 (중기청)	우수한 청년 예비창업자가 유망 벤처기업에서 실전형 인턴 근무 를 통해 경험을 쌓고, 창업시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대학·학생 등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고취	구체적인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사가 있는 대학(원) 재학(학부 4학기 이상 수료) 및 미취업졸업생 등	1. 인턴십 운영: 기업 현장근무 지원(월 80만원 이내) 2. 교육: 창업실무·기업경영 관련 실무교육, 인턴·선배창업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3. 사업화 지원: 창업인프라 구축·활용(공간임대 등),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50	100	50
22	창업보육센터운영 (중기청)	대학·연구소 등을 사업자로 지정,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 공간 제공, 경영·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수행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대학, 연구소 등)	1. 리모델링: 노후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등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 지원 2. 운영비: 전문매니저 인건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비용 지원 3. 보육역량 강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마케팅, 금융투자 등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지원	307	375	68
예산 계 (억 원)					5,752	6,732	980

- 20 -

고용안정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 지원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15년 (억 원)	16년 (억 원)	총액 (억 원)
23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1. 지원기간: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 2. 지원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15년 기준 40,176원)	41,084	51,228	10,144
24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정망 강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50% 지원	5,793	5,202	-591
25	직업안정기관 운영	고용센터, 취업지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관리비, 공공요금, A4용지·토너 등 소모품 구입, 청소 등 위탁 용역, 청사 유지·보수, 구직표 등 각종 서식 유인, 프로그램 참여자 식대 등 소요 비용	364	467	103
26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기간제이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간선택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주를 지원	1.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 2.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 3.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로 근로 중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로 전환한 중견·중소기업	1. 신규창출: 중소기업은 임금의 50%(80만원 한도)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1년간 지원, 대기업은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60만원 한도) 2. 시간선택제 전환: 1) 전환장려금: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월 평균 16만원)을 지원 2)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 3) 대체인력: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대기업 월 30만원)로 1년간 지원 3. 근로조건 개선: 1) 임금상승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정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2)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312	463	151
27	모성보호육아 지원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 휴가급여지원:	1. 출산전후 휴가급여지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8,047	9,297	1,250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지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 받은 경우 2.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2) 그 외 기업: 30일분(상한) 30일당 135만원, (하한) 최저임금 2.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급여 중 일부(25%)는 복귀 후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육아휴직급여액×근로시간단축비율)			
28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활용시 재정지원	일·가정 양립선도기업 중 유연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활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우선지원대상기업	1. 유연근무제 지원: 제도 활용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전체 근로자 5%한도, 최대 1년 지원) 2. 재택·원격근무제 지원: 제도 활용시 사업주에게 재택·원격근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전체 근로자 10% 한도, 최대 1년 지원)	0	32	32
29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단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며, 피보험자(타사업장 포함)의 자녀수가 1/2 이상일 것)	1. 설치비: 1)무상지원 시설전환비: 단독은 3억원(공동 6억원), 산단형은 15억원, 컨소시엄은 6억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2)용자 시설건립·매입·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2. 운영비: 1)인건비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중소기업 120만원) 2)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월 120~520만원	909	1,059	150
30	임금피크제 지원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정을 통한 장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임금피크제 지원금: 60세 이상 정년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감액 이후 소득 연 6,087만원 미만) 2.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50세 이상 근로자	1. 임금피크제 지원금: 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되는 금액만 지원 2.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자는 총액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최대 2년 동안, 사업주는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	320	521	201
31	장애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의무고용률(2.7%, 공공기관 및 지	초과인원 1명당 장애 정도, 성별, 근속	1,417	1,518	101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및 고용촉진 유도	방공기업 3%)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년수에 따라 월 15~50 만원 지원			
32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1.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장애인 및 기업의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 2.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및 개별적 훈련비 지원 등을 제공	15 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1.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와 훈련수당 지급(훈련준비금 4 만원, 가계보조수당 7 만원, 가족수당 1 인당 3 만원, 훈련참여수당 5 만원 등) 2. 공공훈련기관 위탁: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최대 월 6 만원) 지원 3. 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수당 및 훈련비 지원 4. 개별적 훈련비용 지원: 훈련비(최대 100 만원) 지원	143	178	35
33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 및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장애인고용사업주	1. 고용관리를 위하여 일정자격 및 요건을 구비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월 14 만원~최대 70 만원을 최대 3 년간 지원 2.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제약하는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근로지원인 시간당 단가 8,853 원, 주 40 시간 내)	84	149	65
34	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신규채용 근로자 1 인당 연 최대 900 만 원	665	1,093	428
35	고용창출지원사업 (정규직전환지원)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5 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월 60 만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34 세 이하는 80%)와 간접노무비 20 만원을 1 년 지급	196	144	-52
예산 계 (억 원)					59,334	71,351	12,017

※ 푸른색 글씨는 중요 내용이며 붉은색 글씨는 지원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기업 등 기관인 경우를 기재한 것임

♣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